

산업 대전환기 주도할 실사구시형 리더 뽑아야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길을 묻는 첫 전국 단위 선거다. 역사적으로 광주와 전남은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시대정신을 선도하며 대한민국 정치의 ‘나침반’ 역할을 했다. 올해 지방선거는 이러한 호남 정치가 단순히 민주화의 성지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급변하는 산업 대전환기를 주도할 유능한 리더를 배출해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선진 정치 1번지’로 도약할 것인지를 가르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선거를 150여 일 앞둔 지역 정가의 분위기는 엄중하다. 12·3 사태로 인한 ‘내란 세력 심판’과 ‘정권 교체 교두보 마련’이라는 거대 담론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선거야말로 광주·전남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진짜 일꾼’을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는 호남이 민주당의 든든한 기반이라는 점을 넘어, 이제는 그 토양 위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고 선택해 대한민국의 표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호남 역할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호남 정치가 대한민국 정치의 올바른 나침반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선택의 기준이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광주시와 전남도는 심각한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산업 지형을 송두리째 바꿀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

광주·전남의 변곡점에서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단순한 ‘정치 쟁’이 아닌 미래 첨단 산업을 깊이 이해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인재를 필요로 한다. 광주시는 국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기반으로 한 ‘AI 대표도시’ 안착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최근 글로벌 반도체 설계 자산 기업인 ‘Arm(암)’과 협력해 추진 중인 ‘Arm 스쿨’ 등 AI 반도체 인재 양성 프로젝트는 광주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사업이다. 이는 단순한 하드웨어 구축을 넘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청년들을 붙잡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관련 유니콘 기업을 유치하는 복합적인 과제다.

전남도 역시 상황은 긴박하다.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흐름 속에 전남은 해상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대규모 단지 조성의 최적지로 꼽힌다. 여기에 ‘인공 태양’으로 불리는 조전도 핵융합 연구 시설 유치와 분산 에너지 특구 지정 등은 전남의 산업 지도를 농수산업 중심에서 첨단 에너지 산업으로 재편할 절체절명의 기회다. 하지만 이러한 장밋빛 미래를 그리기엔 호남 정치가 마주한 현실적인 지표들이 뼈아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간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 투표율은 37.9%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50.9%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이자, 역대 광주 선거 사상 최저치였다. 저조한 투표율의 배경에는 ‘어차피 당선은 민주당’이라는 체념과 뿌리 깊은 정치적 무력감이 자리하고 있다. 경쟁이 사라진 선거는 유권자를 투표장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이는 다시 정치적 기득권을 강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의회 지역구 의원 20명 중 과반인 11명, 전남도의회 지역구 의원 55명 중 26명이 민주당 단독 후보로 출마해 투표 없이 당선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가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심판문으로만 흐를 경우, 지방자치의 본령인 ‘생활 정치’와 ‘미래 의제’가 실종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지난 선거 광주 투표를 전국 최하위 불명예 일당 독점에 ‘무투표 당선’ 기형적 결과도 풀뿌리 민주주의 외치면서 의원·공약도 몰라 공천 시스템 개혁 유권자 선택권 넓혀야 자질·비전 꼼꼼히 따지는 ‘현미경 검증’ 중앙정치 대리전 아닌 유능한 지역일꾼 선출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내란 청산이라는 중앙 이슈가 블랙홀처럼 모든 지역 현안을 빨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지방선거가 중앙 정치의 대리전으로 전락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지 교수는 이어 “결국 민주당은 텃밭이라는 안일함에서 벗어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을 스스로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관리당원 중심의 폐쇄적인 경선 구조를 개혁하고, 시민 배심원제 도입이나 일반 국민 참여 경선 확대 등을 통해 민심이 반영된 후보, 본선 경쟁력보다 더 뛰어난 ‘자질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영대 전남대 명예교수는 “광주·전남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모든 의석을 싹쓸이하는 결과가 또다시 재현될 가능성을 높다”고 경고했다.

그는 “광역단체장 선거 정도를 제외하면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선거는 시민 선택권이 사실상 배제된 채 공천 결과를 추인하는 요식행위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지역 내 경쟁 상대로서 국민의힘의 존재감이 미미하고, 조국 혁신당이나 진보당 등 군소 정당들 역시 판을 흔들만한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유권자들의 선택지를 좁히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야당의 역할도 중요하다. 국민의힘은 호남 포기 전략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정책과 인물로 승부해야 하며,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야권 군소 정당들 역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대안 세력으로서 수권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건전한 경쟁 구도가 형성되지 않으면 유권자들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 공은 정치권과 유권자 모두에게 넘겨졌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선거가 철저한 ‘인물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광주·전남 대변혁을 앞둔 시점에서, AI와 에너지 등 미래 먹거리를 확실히 쟁길 수 있는 ‘실용주의 리더십’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의 눈높이도 달라져야 한다. 단순히 정당의 색깔을 보고 투표하는 ‘묻지마 투표’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후보자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식견을 갖췄는지, 지역 소멸 위기를 타개할 구체적인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를 현미경처럼 검증하는 ‘간간한 유권자’가 되어야 한다. 시민들이 깨어 있어 정책을 묻고 자질을 따질 때, 정당들도 어쩔 수 없이 최고의 인재를 내세우게 된다. 다가오는 6월 3일, 광주와 전남 시민들의 손에 쥐어질 투표용지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과거의 관성에 머물러 특정 정당에 맹목적인 표를 던질 것인가, 아니면 혁신적인 선택을 통해 우리 지역의 미래를 이끌 유능한 일꾼을 발굴할 것인가. 호남 정치가 대한민국 정치의 나침반으로서, 위기 때마다 올바른 방향을 가리켰던 그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야 할 때다.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 정치를 선진화시키는 출발점이자, 광주·전남이 미래 산업의 수도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되기를 시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첫날인 1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 전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도약 원년 만들겠다”

새해 신년사 ‘모두의 성장’ 화두 제시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국정 운영의 핵심 축을 기존 수도권 중심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완전히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현재의 수도권 일극 체제를 ‘5극 3특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국가 제도의 필수 조건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은 경제 수도, 중부권은 행정 수도, 남부권은 해양 수도로 기능을 분산해 국토를 넓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광주·전남 등 남부권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남부권 반도체 벨트 조성과 인공지능(AI) 실증 도시 구축, 재생에너지 집적단지 활성화 등을 언급하며 첨단 산업 육성이 곧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방에 대한 투자를 시혜가 아닌 필수 성장 동력으로 삼아 교육, 교통, 문화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방 분권과 함께 ‘모두의 성장’도 주요 화두로 제시됐다. 관세 협상 타결과 방산·원전 수출 등 거시 경제 성과가 대기업의 전유물이 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과 서민 가계로 흘러들어가야 한다는 ‘낙수 효과’의 제도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삶의 질도 함께 높아져야 한다”며 “지난해 위기를 극복한 저력을 발판 삼아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국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민주 전격 탈당...“수사 적극 협조”

정청래 “김병기 윤리감찰 지난달 25일 지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이 불거진 지 사흘 만인 1일 탈당했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미 당과 당원 여러분께 너무나도 많은 부담을 드렸고 더는 드릴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당을 떠나더라도 당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 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으며 강 의원은 이런 상황을 당시 서울시장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논의했다고 한 언론이 지난달 29일 보도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이날도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누차에 걸쳐 반한을 지시했고, 반환됐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청래 대표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당 차원의 윤리감찰 조사를 지난 달 25일 지시한 바 있다고 1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김해 봉하마을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내 인사 누구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윤리감찰 대상이 되면 비껴갈 수 없다”며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어 “강 의원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성역일 수 없다”며 “끓여낼 것은 끓여내고 이어갈 것은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조치는 시기적으로 김 전 원내대표가 강선우 의원의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묵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 이전이다.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윤리감찰단 조사 지시 사실이 확인되면서 감찰단은 그에 대한 의혹도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2차)

본 회사는 2025년 12월 01일 당 하사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에서 해산결의 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과 이해관계가 있는 분은 2026년 02월 09일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 합니다.

2026년 01월 02일
주식회사 참진바이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08, 4층(양촌동)
청산인 박진주

73년을 밝히는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역안내 •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장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동 광 433-1603 • 우 산 433-16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안 222-9054 • 중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은 651-1833 • 동 산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삼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문 천 376-7153 • 지 평 376-6511 • 봉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문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청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갈라강판 지붕공사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옥상스틸방수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건물 리모델링

징크판별시공

창호(삿시)교체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담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산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	------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신